



의안번호	제 2022 - 24호
보 고 연 월 일	2022. 12. 5. (제12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1. 개요	2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III. 일본 사법부 방문	3
1. 개요	3
2. 일본 사법부 방문	3
3. 세부 일정(안)	3
IV.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4
1. 개요	4
2. 관련 규정	4
3. 의견수렴 계획	6
4. 시행 일정	11
V. 2021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12
1. 개요	12
2. 추진 경과	12
3. 발간 내역	12
4. 국회 보고	12

5. 기타 기관 배부 13

VI. 제8기 후반기 설정·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 분석 14

1. 개요 14
2. 양형자료조사 내용 14
3. 분석 내용 15

VII.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16

1. 개요 16
2. 분석 목적 16
3. 분석 대상 16
4. 분석 내용 16

VIII. 2023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17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27

1.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27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27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31

[별지1] 법원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36
 [별지2] 죄명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38
 [별지3]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의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의견서」 · 39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화상회의로 진행)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51차	2022. 11. 21. 15:00	○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양형인자, 집행 유예 기준) 검토

II.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2022. 10. 5.자로 이주형 위원(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안정호 위원(변호사) 위촉

2. 신입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2. 12. 5.(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1층 대접건실
- 참석 범위 : 대법원장, 위원장, 비서실장, 상임위원
- 위촉대상자 : 이주형 위원(2022. 10. 5.자)
안정호 위원(2022. 10. 5.자)

※ 이주형 위원, 안정호 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양형위원회 제120차 전체회의의 운영지원단 업무보고에 수록

Ⅲ. 일본 사법부 방문

1. 개요

- 양형위원회가 합리적인 양형정책을 수립하고 양형기준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외국 양형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의 양형실무와 양형정책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관계를 통하여 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 양형위원회의 활동성과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

2. 일본 사법부 방문

- 방 문 자 : 김영란 위원장, 김혜정 위원, 최승원 수석전문위원, 운영지원단장
- 기 간 : 2022. 12. 13.(화) ~ 2022. 12. 17.(토) [4박 5일]
- 방문기관 : 일본 최고재판소, 법무성, 동경지방법재판소

3. 세부 일정(안)

일 시	방문기관	내 용
12. 13.(화)	이동	김포 출발 → 하네다 도착
12. 14.(수)	일본 최고재판소	기관방문
12. 15.(목)	일본 법무성	기관방문
12. 16.(금)	동경지방법재판소	기관방문
12. 17.(토)	이동	하네다 출발 → 김포 도착

IV.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 하는 동시에 양형 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준수를 위한 절차

▶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위임규정)

-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양형기준안의 공개)

위원회는 제16조(양형기준의 설정) 제1항 제2호(양형기준안 작성)의 양형기준안 및 설명서를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자료실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121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양형기준안(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나.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이버수사국장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방 송 통 신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7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8		법 무 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9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0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보호담당관
11		국 가 정 보 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12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13		헌 법 재 관 소	행정관리국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4	연구기관	대한범죄학회	사무국장
15		한국교정학회	사무국장
16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17		한국법학원	총무이사
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총무간사
19		한국형사법학회	총무간사
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1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22		한국피해자학회	총무간사
2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총무간사
2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
25		한국정보보호학회	법무이사
26		한국정보통신학회	사무국장
27		한국통신학회	사무국장
28		정보통신정책학회	총무이사
29		유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30	대한법무사협회		사무총장
31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3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3	한국범죄방지재단		사무총장
3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36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3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3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소장	
3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디지털융합본부장	
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41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4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4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안전과장	
44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장	
4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4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4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본부장	
48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4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50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51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52	진보네트워킹센터		정보인권팀	
53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54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다.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8		기 획 재 정 부	관세정책관
9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10		관 세 청	법무담당관
11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12		국 세 청	징세법무국장
13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4		연구기관	대 한 범 죄 학 회
15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6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7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8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9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1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22		한 국 피 해 자 학 회	총무간사
23		한 국 형 사 소 송 법 학 회	총무간사
24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총무간사
25		한 국 관 세 학 회	사무국장
26		한 국 조 세 법 학 회	사무국장
27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8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9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1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사무총장
3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34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사무총장
35		한 국 관 세 물 류 협 회	전무이사
36		한 국 관 세 사 회	사무처장
37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연구기획실장
38		한 국 관 세 무 역 개 발 원	경영본부장
39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사무국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40		국 제 원 산 지 정 보 원	FTA총괄본부장
41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42		참 여 연 대	사범감시센터
43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44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22. 12. 9. ~ 2023. 1. 10.

○ 의견조회 취합 : 2023. 1. 10.

※ 의견수렴 결과는 의견수렴 후 해당 안건의 양형위원회 회의 시 보고 예정

V. 2021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1. 개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규정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매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연간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양형위원회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하고 대외 홍보에 활용하여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2022. 3. 28. 양형위원회 제115차 회의에서 ‘2021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결’ 의결

2. 추진 경과

- 2022. 3. 28. : 2021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계획안 의결
- 2021. 11. 초순 : 초안 작성
- 2021. 11. 중순 : 견본 제작
- 2021. 11. 하순 : 교정 작업
- 2021. 12. 초순 : 인쇄의뢰 및 제작
- 2021. 12. 중순 : 국회보고 및 배부 완료

3. 발간 내역

- 발간 부수 : 1,522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88×257, 2도 양면
 - 610여 쪽

4. 국회 보고

- 2022. 12.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공문 접수 후, 우편 송부

5. 기타 기관 배부

○ 배부원칙

- 연간보고서 책자의 적정한 배포 및 관리
- 예산낭비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

○ 배부기준

- 홍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 우선 배부
- 필요적 이용기관과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배부
- 사법발전에 기여하거나 자료가치를 높이는 부서에 배부

○ 배부처

-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회, 주요 도서관 등

VI. 제8기 후반기 설정·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1. 개요

- 제8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인 교통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양형기준 설정안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료를 제공
 - 범죄유형의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 추출
- 2022. 8. 16.부터 2022. 9. 8.까지 양형자료조사 실시
- 2022. 10. 14.부터 2022. 10. 17.까지 양형자료조사 추가 실시

2. 양형자료조사 내용

(1) 조사 대상범죄

- 제8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인 교통범죄에 대하여 전국 법원에서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선고된 사건
- 조사 대상 건수 : 4,236건 중 일부 사유를 제외한 최종 대상사건은 3,719건임(세부 죄명별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 추출)

(2) 조사기간

- 2022. 8. 16.(화) ~ 9. 8.(목)
- 2022. 10. 14(금) ~ 10. 17.(월)

(3) 조사방법

- 양형자료분석관 중 본부 소속 분석관 8인과 경인지역 분석관 3인, 자료조사과장, 행정관을 포함한 전체 13명으로 조사를 시행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과 방역수칙상 제한으로, 검찰 출장조사 형식이 아닌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양형정보시스템에 입력

(4) 조사 완료

- 예정된 조사기간 동안 전체 조사대상 4,236건 중 이중경합범 등의 비 해당 사유로 517건을 제외한 3,719건의 양형자료조사를 완료함
- 법원 및 죄명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은 [별지 1, 2] 참조

3. 분석 내용

- 교통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세부죄명 및 적용법조별로 분류하여 통계분석 결과를 설명
 - 각 장에는 사건수, 선고내역 등을 포함한 전체 현황, ① 전체 범죄군의 조사 인자에 대한 빈도표를 제시하였고, ② 분산분석 및 T-test의 방식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징역형의 형량, 벌금형의 벌금액 차이를 분석하고, ③ 카이제곱 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징역형·벌금형 선택여부, 실형·집행유예 여부를 분석함

Ⅶ.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1. 개요

- 운영지원단은 1심 판결문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점검하였으며,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책자로 발간함
- 양형기준 적용현황의 정기적인 분석 및 보고는 운영지원단의 주된 업무임(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양형기준의 적용 확인)

지원단은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분석 목적

- 양형기준 활용 실태, 준수 여부, 적용 효과 파악
- 양형기준 개선사항 확인

3. 분석 대상

- 각 범죄군 양형기준의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1심에서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사건

4. 분석 내용

- 양형기준 준수율, 양형이유 기재 여부, 특별양형인자의 유무에 따른 형량 비교분석, 특별양형인자와 형량과의 연관성 정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함

VIII. 2023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양형기준 설정·수정	
1	<p>○ 추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설정 :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벌금형) 수정 :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교통범죄(자유형)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6. 7.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관련 추진 업무 의결(양형위원회 제110차 회의) - 2021. 6. 21. 양형연구회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 2021. 6. 23. ~ 7. 6. 아동학대범죄 제1심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실시 - 2021. 11. 8. ~ 12. 10. 성범죄 제1심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실시 - 2022. 1. 24.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의결(양형위원회 제114차 회의) - 2022. 1. 28. ~ 2. 28.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22. 2. 25.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22. 3. 28.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및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의결(양형위원회 제115차 회의) - 2022. 4. 25. ~ 5. 6.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 2022. 5. 2.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양형위원회 제116차 회의) - 2022. 5. 6. ~ 6. 7.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22. 7. 4.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 2022. 8. 16. ~ 9. 8. 교통범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8. 1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양형위원회 제118차 회의) - 2022. 9. 19.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심의(권고 형량범위)(양형위원회 제119차 회의) - 2022. 10. 14. ~ 10. 17. 교통범죄 확정사건 추가 양형자료조사 - 2022. 10. 21.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양형위원회 제120차 회의) - 2022. 12. 5.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의결(예정)(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2.~2023. 1.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치 - 2023.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심의, 의결 - 2023. 1.~2.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치 - 2023. 2.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 2023. 3.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 2023. 6.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관련 추진 업무 의결 - 2023. 6.~7.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의 제1심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실시 - 2023. 8.~12.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의 양형기준안 심의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2	<p>양형정책 연구·심의</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과 형벌, 형사재판에 관한 근본이념과 양형 관련 다양한 쟁점들을 연구, 공론화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양형기준과 양형실무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중추

	<p>적 역할을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기관, 실무계, 학계 등 각계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4. 4.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회의 및 제8차 심포지엄의 주제, 일시 등 선정 - 2022. 6. 10. 양형연구회 8차 심포지엄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 개최 - 2022. 7. 21. 양형연구회 간사단 회의 및 사법발전재단 간행 학술지 「사법」의 소특집(양형의 주요 쟁점) 발간, 소주제, 집필진 구성 등을 논의 - 2022. 11. 28. 2022년 하반기 심포지엄은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로 대체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심포지엄 개최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나갈 예정 - 2023. 3. 15. 사법발전재단 간행 학술지 「사법」에 「소특집: 양형의 주요 쟁점」 발간 예정 - 2023년 상반기 양형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위해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을 활용한 조사 연구 의뢰 예정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3	<p>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수정 절차의 객관화·투명화 -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 <p>○ 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 중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에 관한 의견 수렴 -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인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 자문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양형위원회 활동과 양형기준안에 관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사법 신뢰도를 제고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의견 수렴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추가 제작

○ 추진경과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의견수렴
 - 2022. 1. 28. ~ 2. 28. 법원·국회·법무부 등 관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 2022. 2. 25. 공청회 개최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 2022. 5. 6. ~ 6. 7. 법원·국회·법무부 등 관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 자문위원 자문 청취를 통한 의견수렴
 - 2021. 8. 신규 자문위원 11명을 위촉하여, 지역, 성, 연령 면에서 다양성과 균형을 도모함
 - 2022. 2. 14. 자문위원 제13차 회의 개최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추가 제작
 - 2022. 12. 2. 추가 콘텐츠(횡령, 마약) 오픈(예정)

○ 추진계획

-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
 - 2022. 12.~2023. 1. 법원·국회 등 관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 2023. 2.경 공청회 개최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 2023. 1.~2. 법원·국회 등 관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2.경 공청회 개최 - 자문위원의 자문 청취를 통한 의견수렴 · 2023년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양형기준안 중 주요 쟁점에 관한 자문 의견을 청취 -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사법 신뢰도를 제고 · 상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비정기적으로 통계 산출 · 2022. 12. 오픈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콘텐츠 홍보 · 2023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콘텐츠 제작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 통계분석과)</p>
4	<p>양형기준 공개</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관보 게재는 양형기준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적 절차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양형기준 책자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양형기준 제도 및 양형위원회 홍보 <p>○ 추진경과 및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최종 의결 후 1개월 내 관보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새롭게 시행되는 양형기준 게시 - 2022. 6. 『2022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법원·국회·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포 - 2023. 6.경 『2023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법원·국회·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포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5	<p>2022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위원회 의결 · 2022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실적 및 2023년도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안 정리 - 2023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 법원·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포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p>외국 양형위원회 등과의 교류</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양형위원회 및 사법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양형위원회 운영 경험 공유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의 대외 홍보 <p>○ 추진경과</p>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양형기준 제도 발전을 위한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협력, 우리나라 양형기준 홍보를 위해서 2021. 12.경 ‘2021 영문 양형기준’ 발간 - 양형위원회 영문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c/engsc/index.jsp)를 업데이트하고, ‘2021 영문 양형기준’의 내용 수록 -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1. 28.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양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형의 합리화 방안 - 현황과 과제- (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를 주제로 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에서 보다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하고자 추진한 주요 사법제도 및 정책의 내용, 그 성과 및 과제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 진행 · 제2주제 :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Reasonable Sentencing: Future Challenges)」 : 최근 양형 분야의 주요 쟁점인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 (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을 세부 주제로 하여 우리나라, 미국, 독일 및 영국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 진행 - 일본 사법부 방문(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2. 13. ~ 17.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양형위원 등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자료,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양형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일본 최고재판소, 법무성 등을 방문 ○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8. ~ 11.경. 외국 대법원, 외국 양형위원회 방문 · 미국, 유럽 등 각국의 양형위원회와 사법기관을 방문하여 양형실무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양형위원회 운영 경험 공유, 한국 양형위원회의 활동성과에 관한 홍보 · 2021. 12. 발간한 '2021 영문 양형기준'을 교부하여, 한국 양형위원회의 성과 홍보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7	<p>양형자료분석관 운영점검 업무시스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분석관의 양형기준 운영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사용자인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 ○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분석관용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개발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시행된 양형기준 수정 범죄(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대한 양형기준 내용 시스템에 반영 -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 및 2022. 7. 양형자료분석관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 실시 · 2022. 11. 11.~12.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개최 · 양형자료분석관 회의 수시 실시 ○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분석관용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개발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사용자인 양형자료분석관의 시스템 개선 요청 내용을 정리 및 취합하여 해당 내용이 시스템 개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2023년 시행될 양형기준 설정(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교통범죄 중 벌금형 양형기준), 수정(교통범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스템에 반영 · 전산정보관리국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 수정·보완 - 군사법원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개발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개발 진행 중인 군사법원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완료 · 군사법원 전체 선고사건 중 양형기준 대상사건 선별, 군사법원 선고사건 판결문 등록 작업 진행 -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 및 2023. 7. 양형자료분석관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 실시 예정 · 양형자료분석관 정기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분석관 업무의 전문성 제고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자료조사과)</p>
8	<p>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p>○ 추진경과 및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양형자료분석관들이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월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p>
<p>9</p>	<p>효율적인 양형 통계분석</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관련 연구 및 기존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에 필요한 각종 통계분석 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을 통해 양형기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분석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9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 및 기존 제1기 부터 제8기까지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분석 실시 - 군사법원 선고사건 중 양형기준 대상사건의 적용현황 통계분석 실시 - 통계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범죄군별 사건분포, 선고내역, 양형기준 준수여부 등과 관련된 통계 산출 - 각종 양형인자에 대한 교차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통계분석 실시하여 양형인자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분석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위원회 보고 - 양형기준 수정 및 양형정책 수립 시 분석내용 반영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통계분석과)</p>
<p>10</p>	<p>新양형기준시스템 개선·운영</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12. 新양형기준시스템이 개발되어 2019. 3. 정식오픈 - 新양형기준시스템 사용자인 법관의 판결문 작성 시 이용 편의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 반영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수정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시행된 양형기준 수정 범죄(아동학대범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내용 시스템에 반영 - 수정 필요 사항 지속 발굴 및 반영 · 서술식 기준 반영 및 설명 팝업창 신설 · 적용법조 및 죄명의 정비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법정형 등 수정 반영 - 운영점검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양형기준 유사 판결문 검색 기능 시스템에 반영 -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련 이용 편의 내용 시스템에 반영 - 2023년 시행될 양형기준 설정(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교통범죄 중 벌금형 양형기준), 수정(교통범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스템 반영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통계분석과)</p>
--	---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의견서」 제출

-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의견서임
-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양형편차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양형기준 설정이 요구된다는 내용임

※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의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의견서」는 [별지 3] 기재와 같음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2. 10. 31.까지 총 640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2. 8. 17. ~2022. 9. 7.(243)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2	2022. 9. 6. ~2022. 10. 15.(3)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3	2022. 9. 8. ~2022. 10. 10.(390)	○특정사건 강력 처벌 요청
4	2022. 10. 2.(1)	○양형위원 자격 요건
5	2022. 10. 14.(1)	○양형인자에 관한 질의

6	2022. 10. 15.(1)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7	2022. 10. 20.(1)	○유기견보호소의 관리 및 감독 강화 요청

○ 1번,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그 외에 특정사건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양형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8편 양형위원회, 제81조의3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5가지 대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처벌불원 인자는 위 5가지 대유형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유형에서는 일반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4가지 대유형에서는 특별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은 일반양형인자로 규정된 경우도 있고, 또는 특별양형인자로 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중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의 처벌불원 인자는 형량범위를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인 경우를 의미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유형에서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한 처벌불원은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유기견 보호소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2. 10. 31.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15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2. 10. 14. ~ 2022. 10. 28.(7)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2	2022. 10. 10. ~ 2022. 10. 28.(7)	○ 특정사건 강력 처벌 요청
3	2022. 10. 20.(1)	○ 개별사건과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2. 10. 31.까지 총 9건)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2. 9. 26.(1)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요청
2	2022. 9. 27.(1)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3	2022. 9. 29.(1)	○마약판매상에 대한 처벌로 사형 건의
4	2022. 10. 7.(1)	○성착취범죄 근절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 등 요청
5	2022. 10. 14.(1)	○개별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6	2022. 10. 14.(1)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관련 판결에 대한 불만 토로
7	2022. 10. 20.(1)	○성별에 따른 형량 차이에 대한 의견
8	2022. 10. 31.(1)	○1)변호사 광고 문구에 대한 의견 2)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남용되고 있는데 대한 의견 3)벌금 및 과태료 금액의 현실화 4)자동차 보험업계의 과실산정의 문제점 5)교통사고 관련 범죄 및 사기범죄의 형사처벌 결과가 민사소송과 연동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6)사형제도 부활 검토 요청
9	2022. 10. 31.(1)	○성범죄자 얼굴 공개 요청

○ 1번, 2번,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형사재판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발생하여서는 안 되고, 양형위원회는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에 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1)번, 3)번, 4)번, 5)번, 6)번)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번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나. 민원 우편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2. 10. 31.까지 총 1건)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2. 10. 12.(1)	○ 마약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송부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현재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귀하가 요청하신 양형기준을 송부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

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등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 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별지 1] 법원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단위: 명

법원	선고연도				전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6월	
서울중앙	39	91	103	0	233
서울동부	23	40	58	1	122
서울남부	42	84	115	2	243
서울북부	30	54	57	1	142
서울서부	18	43	66	0	127
의정부	58	101	92	0	251
고양	0	0	0	3	3
인천	64	122	126	7	319
부천	0	0	1	0	1
수원	71	152	217	6	446
성남	0	0	2	0	2
평택	0	0	2	0	2
안산	0	0	2	0	2
안양	0	0	2	0	2
춘천	15	27	30	0	72
강릉	0	1	0	0	1
영월	0	1	0	0	1
대전	61	102	108	2	273
논산	0	0	1	0	1
서산	0	1	1	0	2
천안	0	1	2	0	3
청주	29	55	82	1	167
충주	0	0	0	1	1
대구	41	73	71	0	185
대구서부	0	0	2	1	3
안동	0	0	1	0	1
경주	0	1	2	1	4
김천	0	1	1	0	2
부산	42	65	62	1	170
부산동부	0	1	4	0	5
부산서부	0	0	6	1	7
울산	40	84	86	0	210
창원	29	53	86	1	169

단위: 명

법원	선고연도				전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6월	
진주	0	0	0	1	1
광주	60	138	84	1	283
목포	0	0	1	0	1
순천	0	1	1	0	2
전주	13	58	71	2	144
정읍	0	0	1	1	2
제주	30	57	27	0	114
전체	705	1,407	1,573	34	3,719

[별지 2] 죄명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단위: 명, %

사건명	조사건수	비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46	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369	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58	1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311	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611	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60	4.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199	5.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3	0.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162	4.4
전체	3,719	100.0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의견서

1. 동물학대범죄의 의의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최근 추세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이에 대한 처벌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그러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¹⁾은 2010년 69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4.4배 증가
- 동물학대범죄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증가하는 배경은 반려인구의 증가와 길고양이 돌봄활동의 확산 등으로 인한 동물과의 접점이 넓어졌다는 점, 동물에 복지 및 권리 향상에 따른 기존 인간중심가치관과의 충돌, 동물학대 문제인식 향상에 따른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보임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동물학대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
-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범죄는 현재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및 사법연수원 「범죄백서」 등에서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기준 역시 부재
- 동물학대범죄는 생명체인 동물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기타 재산이나 물건에 대한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관심 필요. 특히 인간에 대한 폭력과 범죄로의 전이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외국 연구사례를 통해 동물학대가 가정폭력 등 인간에 대한 폭력사이에 인과관계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연관성이 존재함을 확인 가능하며²⁾, 피학대 경험자가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통해 폭력이 인간에게 재전이 가능성도 배제 불가³⁾

1) 현재 동물학대범죄만을 다루는 별도의 통계자료는 부재

2) Frank R. Ascione, Claudia V. Weber, and David S. Wood, 1997, UTAH STATE UNIVERSITY "The Abuse of Animals and Domestic Violence: A National Survey of Shelters for Women who are Battered"

3) Anne M. Volant, Judy A. Johnson, Eleonora Gullone, Grahame J. Coleman,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Animal Abuse : An Australian Study"

2. 구성요건 및 법정형

-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명시
- 그러나 모든 동물학대행위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이중 양형기준을 요하는 ‘동물학대범죄’는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범죄행위로 판단되며,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과 위반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음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동물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조	항	구성요건	법정형
98	①	1.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 2.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함 3. 고의적인 사료 및 물 미급으로 인한 죽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함	징역 3년↓ 3,000만원↓ (선택)
	②	1.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한 상해(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은 제외) 2. 살아 있는 상태에서의 신체 손상 및 체액을 채취와 이를 위한 장치 설치 행위(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의 경우는 제외) 3. 도박·광고·오락·유흥 목적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전통소싸움 등은 제외) 3의2.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 질병 유발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징역 2년↓ 2,000만원↓ (선택)
	③	다음 각 동물에 대한 포획하여 판매, 죽이는 행위나 이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동물학대범죄 현황

- 동물학대범죄 통계자료의 부재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자료로 추정해보면 동물학대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⁴⁾]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검거 건수	322	416	723	747	688
검거 인원	459	589	962	1,014	936

- 반면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송기훈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리내역에서 자유형을 선고 받는 이는 전체 346명 중 19명(5.5%)에 불과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리내역⁵⁾]

연도별 구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집행유예(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결정등
2017년	50	1	9	24	-	9	1	6
2018년	49	2	5	31	1	3	1	6
2019년	60	5	8	35	3	2	-	7
2020년	65	3	10	38	2	1	1	10
2021년	106	5	19	63	3	-	4	12
2022년 1~3월	16	3	3	6	2	-	1	1
총계	346	19	54	197	11	15	8	42
%	100	5.5	15.6	56.9	3.2	4.3	2.3	12.1

4) 경찰청,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현황'(경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자료실 자료)

5) 송원석 의원, "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 구속기소 0.1%,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쳐"(보도자료, 2022.8.26.)

4. 양형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점과 필요성

가. 동물학대범죄의 증가 및 사회적 요구

- 전술한 바와 같이 동물학대 범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법무부의 2020년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처분건수는 1,110건으로⁶⁾ 현재 발생하는 범죄건수도 다른 범죄와 비교시 결코 적지 않음

[2020년 범죄유형별 검찰처리 건수]

범죄분류	범죄유형	검찰처리 건수
재산범죄	사기	351,908
	교통범죄	313,239
강력범죄	폭행	189,645
재산범죄	절도	100,026
강력범죄	상해	52,120
재산범죄	손괴	40,210
	명예범죄	38,801
재산범죄	횡령	37,930
	신용업무 경매범죄	29,216
	지식재산권범죄	26,651
강력범죄	협박	23,064
사이버범죄	명예훼손	20,391
보건범죄		19,282
	주거침입범죄	16,041
사이버범죄	컴퓨터 사용사기	13,836
마약류범죄		12,927
	권리행사방해범죄	11,154
사이버범죄	개인정보 보호법	8,601
재산범죄	배임	8,355
	환경범죄	7,990
강력범죄	공갈	7,398
사이버범죄	기타	6,675

6) 송원석 의원, "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 구속기소 0.1%,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쳐"(보도자료, 2022.8.26.)

사이버범죄	전자문서 관련죄	5,929
경제관련범죄	조세범 처벌법	5,062
사이버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등	3,821
강력범죄	폭처법(손괴/강요/주거침입등)	3,563
사이버범죄	음란물유포 등	2,891
강력범죄	체포감금	2,396
선거범죄		2,375
재산범죄	장물범죄	1,074
경제관련범죄	관세법	915
경제관련범죄	부정수표단속법	688
경제관련범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24
경제관련범죄	외국환거래법	437
강력범죄	폭처법(단체등의 구성/활동)	380
경제관련범죄	대외무역법	343
강력범죄	약취/유인	292
사이버범죄	전산업무 방해	252
사이버범죄	전자기록 비밀침해	128
사이버범죄	전자기록 손괴	87
경제관련범죄	상법	78
사이버범죄	개인정보 누설등	68
경제관련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5
사이버범죄	공용전자 기록손상 등	5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기준을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로 설명⁷⁾
- 동물학대범죄는 범죄의 발생빈도가 낮지 않으며, 증가추세에 있고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의 전이 등 사회적 관심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형위원회가 밝힌 양형기준 설정기준에 부합

나. 양형편차 발생

- 유사한 범죄라 하더라도 사건마다의 구체적인 내용, 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재판부의 성향 등에 따라 양형의 편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

7) 양형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 2022.10.12.,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다면 양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위협

- (판례 1) 2017년 11월 서울 강북구에서 건물 보일러실에 주인이 없는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보일러실을 더럽힌 것에 화가 나 집어 던지고, 발로 공을 차듯 걷어차 고양이 1마리를 죽이고, 고양이 1마리의 척추 등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1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59 2018. 3. 29 선고)
- (판례 2) 2017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평소 고양이가 텃밭에 똥을 뉘 화가나 포획틀을 설치하여 고양이를 포획한 뒤 토치에 불을 붙여 고양이에게 분사, 털이 타게 하여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벌금 30만원 선고(창원지법통영지원 2018고정1 2018. 3. 26 선고)
- (판례 3) 2019년 7월 서울 마포구에서 고양이 '자두'8)를 꼬리를 움켜쥐고 들어 올린 후 수회 땅바닥과 테라스 벽 등에 내리찍고, 머리 부위를 수회 세게 짓밟아 죽인 후 고양이 사체를 화단 구석진 곳에 버린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 2803 2019. 11. 21 선고)
- 세 사건은 같은 종의 동물에 대하여 각기 상해를 입히거나 죽인 사건으로 판례 1의 경우 범행수법도 잔혹하고,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죽이고, 한 마리는 중상해를 입혔으나 선고를 유예해 형 자체를 면하도록 하였고, 비슷한 시기 발생한 발생한 판례 2의 사건에서는 토치를 사용해 고양이에게 불을 붙여 상해를 입힌 사건임에도 고작 벌금 30만원을 선고. 판례 3의 경우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를 했으나 앞의 두 사건과 잔혹성, 피해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선고된 형에 있어 현격한 차이 존재. 이렇듯 일관성 없는 판결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

다 온정주의적 선고

- 동물학대범죄는9) 201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통해 징역형이 처음 도입(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된 이래 처벌조항이 강화

8) 길에서 태어나 생활하던 길고양이였으나 사건의 피해자인 인근 가게 주인이 평소 돌보며 키움

9) 동물보호법 제8조의 제1항에서 제3항에서 해당하는 범죄행위

되어 2017. 3. 21 개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2020. 2. 12 개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빠르게 변화

- 처벌기준의 강화는 더이상 동물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 및 상해를
가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합
의를 의미. 그럼에도 동물학대범죄의 경우 그 판결이 다른 범죄와 비교
하더라도 지나치게 온정적인 경향을 띠
- 2021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결과를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보면 전
체 범죄의 자유형 비율은 60.8%(유기징역 26.5%, 집행유예 34.3%)인데
반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경우 22.6%(유기징역 4.7%, 집행유예
17.9%)에 불과. 특별법에 따른 범죄의 경우에도 57.0%(유기징역 15.1%,
집행유예 41.9%)가 자유형으로 큰 차이를 보임. 특히 실형의 경우 기타
특별법에 위반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1/3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음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1심 처리 결과 타범죄와의 비교¹⁰⁾]

연도별	구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유기/유기 징역	집행유예	재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전체범죄		244,988 (100)	64,886 (26.5)	84,046 (34.3)	65,313 (0.7)	1,817 (2.6)	6,267 (2.6)	22,659 (9.2)	
형법 위반		134,447 (100)	48,167 (35.8)	37,773 (28.1)	29,952 (22.3)	1,043 (0.8)	3,300 (2.5)	14,212 (10.6)	
특별법 위반		110,541 (100)	16,719 (15.1)	46,273 (41.9)	35,361 (32.0)	774 (0.7)	2,967 (2.7)	8,447 (7.6)	
기타특별법 ¹¹⁾		50,395 (100)	8,712 (17.3)	14,645 (29.1)	17,983 (35.7)	678 (1.3)	2,708 (5.4)	5,669 (11.2)	
동물보호법 위반		106 (100)	5 (4.7)	19 (17.9)	63 (59.4)	3 (2.8)	-	4 (3.8)	12 (11.3)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가운데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선고할 경
우 현재 처벌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적절한 양형기준 설정이 요
구됨

10) 사법연수원 「2021 범죄백서」 및 송원석 의원 보도자료 참조

11) 특별법 위반 사범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주요범죄를 제외한 특
별법에 해당하는 범죄사범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도 기타특별법 통계에 포함